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U턴 위반
범칙금 6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 4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교통위반 공익 신고

"준법정신 높아져" vs "공익 좋지만 너무해"

광주 신고 4년새 6배 급증…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 효과
무분별 신고에 서민 운전자 고통·경찰 업무 마비 호소도

광주에서 교통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411건에 불과하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난해에만 무려 3만1408건이 접수돼 4년 새 6배 이상 증가했다.

폭증하는 공익신고를 놓고 "준법의식을 높인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신고 남발에 따른 서민 운전자의 고통 가중, 경찰 민원 업무 마비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26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자가용 차량은 59만7843대로, 등록 차량의 5.25%에 가까운 3만 1408건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공익 신고됐다.

최근 5년간 공익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6621건 ▲2014년 1만1520건 ▲2015년 2만1156건 ▲2016년 3만1408건 ▲2017년 10월 현재 2만4571건으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 2001년 시행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는 2년 만에 폐지됐다.

광주경찰은 접수된 신고내용과 영상 등을 판독한 뒤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공익신고 항목은(승용차 기준)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신호위반(6만원·15점) ▲U턴 위반(6만원) ▲교차로 꼬리물기(4만원) ▲방향지시 등 불이행(3만원) ▲끼어들기(3만원) 등이다. 범칙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대부분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촬영한 뒤 '국민신문고(epeople.go.kr)'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onetouch.police.go.kr)'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일부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차량 내 블랙박스 보급이 증가하면서 공익신고 건수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 공익신고가 늘면서 신고를 당한 시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공익신고의 효과에는 공감하면서도 무분별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경찰은 휴일마저 반납한 채 공익신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지만, 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신고 동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을 경우 촬영 장소와 차량 번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 매달리고 있다.

경찰서마다 공익신고 및 주요 민원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1~2명으로, 이들은 몰려드는 공익신고 탓에 다른 민원업무는 처리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여기에 하루 평균 1~2명씩 경찰서를 찾아와 "누가 신고를 했느냐"며 항의하는 시민을 상대하는 것도 고된 업무 중 하나다.

공익신고로 범칙금을 냈다는 한 운전자는 "차량정체로 서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면서 횡단보도 정지선으로 앞 범퍼가 5㎝ 남짓 들어갔는데, 이 장면을 찍어 신고했더라"면서 "고의적 위반도 아닌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실하면 괜찮은데, 일부 신고자들은 위반 여부가 애매하거나 50m가 넘는 거리에서 촬영한 (화질이 나쁜)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건씩 제출하는 사례도 많다"고 호소했다.

반면, 현 경찰인력만으로는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은 "공익신고가 늘어 경찰업무 감소 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의식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면서 "운전자들도 블랙박스를 통해 항상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AI 차단 방역 강화 26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에 설치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거점 소독시설이 양계농가 출입 차량에 소독액을 분사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뒤늦게 밝혀진 동거男의 진실 알고보니 전과 18범 '남장 여자'

승용차·현금 훔쳐 도주
광양경찰, 40대 구속

올해 초 인천에서 한 남성을 만난 김모(여·57)씨는 수려한 외모와 자상함에 반해 사귀기 시작했고 동거까지 하게 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두 사람은 생활형편이 어려워졌고 올해 7월 광양에 살고 있는 김씨의 올케 언니 임모(여·73)씨 집에서 잠시 지내기로 한다. 평소 김씨와 자주 통화하며 친하게 지냈던 임씨는 남자 친구를 데려온다는 김씨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이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다.

임씨도 김씨의 남자 친구가 싫지 않았다. 평소 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농사일도 잘 도와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씨와 김씨는 지난 9월13일 승용차가 사라진데다 통장에서 현금 200만원까지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종적을 감춘 남자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후 주변 사람에게 수소문한 결과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한치 의심 없이 남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여자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평소 잠자리를 피하던 행동을 이해하게 됐다.

광양경찰은 "70대 여성의 차량과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여·4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1시40분께 광양시 한 농협지점에서 훔친 임씨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고, 다음날 오전 8시40분께 임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인천까지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남자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고 짧은 머리와 남성복을 입고다니는 등 남자행세를 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 금품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사기 등 전과만 18범에 달했다.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한 뒤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군수 지시 인사기록 조작 공무원 징계 정당

법원 "불법 명령 따를 의무 없어"
해남군 공무원 3명 소송 패소

자치단체장 지시로 직원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해남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직무상 상관의 명령이라도 명백한 불법명령일 때는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해남군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1~2015년 해남군 인사담당으로 있으면서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2015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군수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관행이었고 상급자인 박 군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은 부하 직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부하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뇌물 받고 수사 기밀 누설 경찰 간부 체포

뇌물을 받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체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보성경찰서 A(49)경위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아는 업자가 보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A 경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분석했다. A경위는 뇌물수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수사 내용과 혐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태국 식료품 판매점 태국인 업주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태국 식료품 전문 판매점에서 태국인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태국 식료품 가게에서 주인인 태국인 A(여·55)씨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00년 입국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광주에서 거주해왔다. 시신을 발견한 A씨 조카는 "지난 21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가게를 찾아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외상이 없고 다투거나 반항한 흔적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연락되지 않을 시점인 지난 21일 불법 체류자인 종업원 태국인 B(25)씨가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살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합계 전과 26범 중학생 3명 하룻밤새 차량 6대 털다 '덜미'

쌍나팔

○…합계 전과만 26범에 달하는 중학생 3명이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여수에서 하룻밤 사이 차량 6대를 털었다가 PC방 종업원의 제보로 경찰서행.

○…26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이모(15)군 등 10대 청소년 3명은 지난 20일 오후 6시 50분께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에 도착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 도로에 세워진 황모(45)씨의 렉서스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나이에 비해 절도전과가 많은 이군 등은 거주지인 천안에서는 경찰의 감시 때문에 절도가 여의치 않자 이날 연고가 없는 여수를 목표로 삼았는데, 여수경찰은 "범행 대상차량의 블랙박스를 훼손해 증거를 제거하는 등 성인 못지않은 치밀한 수법을 보여 구속 후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

/여수=김창화기자 chkim@k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 1158	1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1202-8 474㎡	답	130,438,4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제시외건물포함
		완도군 약산면 약산로 325 97.00㎡ 제시외 창고 등 37.7㎡	단독주택	130,438,400	
2017타경 1257	1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235-6 106㎡	대	21,525,2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진도군 군내면 대야길 70 47.7㎡ 제시외 주택 등 35.9㎡	농기구수리점	21,525,200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476	1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300 231㎡[매각외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4,158,000	제시외건물및수목3주제외
				4,158,000	
	2	동소 351 1385㎡	전	4,293,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유지
				4,293,500	
	3	동소 352 2978㎡	답	26,410,4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적경계불명.맹지
		동소 352-1 2050㎡	답	26,410,400	
		동소 447 1312㎡	전		
2017타경 957	1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377 658㎡[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6,053,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맹지
				6,053,600	
2017타경 1028 2017타경 4010 [중복]	1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935-1 106㎡	대	3,632,4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937-1 215㎡[물건번호1:매각외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전	3,632,400	
	2	동소 940-1 304㎡[매각외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3,648,000	
				3,648,000	
	3	동소 838 1346㎡[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9,287,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9,287,400	
	4	동소 산318 3769㎡	임야	8,668,700	
				8,668,700	
2017타경 1400	1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1014 2440㎡	전	100,0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00,040,000	
2017타경 1400	2	동소 1041 820㎡	답	54,1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4,120,000	
2017타경 1448	1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17-2 235㎡	대	22,325,000	
				22,325,000	
2017타경 50136	1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845-2 443㎡	대	3,544,000	
				3,544,000	
	2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779-1 365㎡[매각외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잡종지	7,665,000	매각외타인소유건물존재함
				7,665,000	
2017타경 50198	1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1136 674㎡	임야	13,480,000	맹지
				13,480,000	
	2	동소 산158-2 10306㎡	임야	257,801,200	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57,801,200	
2017타경 50433	1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1334-1 175㎡[매각외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3,500,000	매각외건물존재함
				3,500,000	
	2	동소 1336-1 281㎡	대	6,744,000	현황전및일부도로임
				6,744,000	
[기타]					
2017타경 810	1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329-1 1078㎡ 제시외 창고 등 42.7㎡	대	92,550,4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92,550,440	
		해남군 북평면 볼무당길 18 217.58㎡ 부속건물 관사33.0㎡ 변소19.96㎡	청사		
2017타경 1097 2017타경 3147 [중복]	1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309-5 795㎡	잡종지	123,249,000	일괄매각.매각외건물[타인소유컨테이너관리사]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해남군 삼산면 감당길 11-4 [가동] 98㎡ 제시외 창고 등 257.71㎡[제시외건물포함]	농산물가공시설	123,249,000	
		동소 11-4 [나동] 35㎡	냉동창고		
2017타경 1219	1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28 1187㎡	대	192,468,200	일괄매각.목록1㈜명량지분1022/1187전부
		진도군 고군면 벌포길 24-8 462㎡ 제시외 창고 32.4㎡[제시외건물및기계기구포함]	소매점	192,468,2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12. 11.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12. 18.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